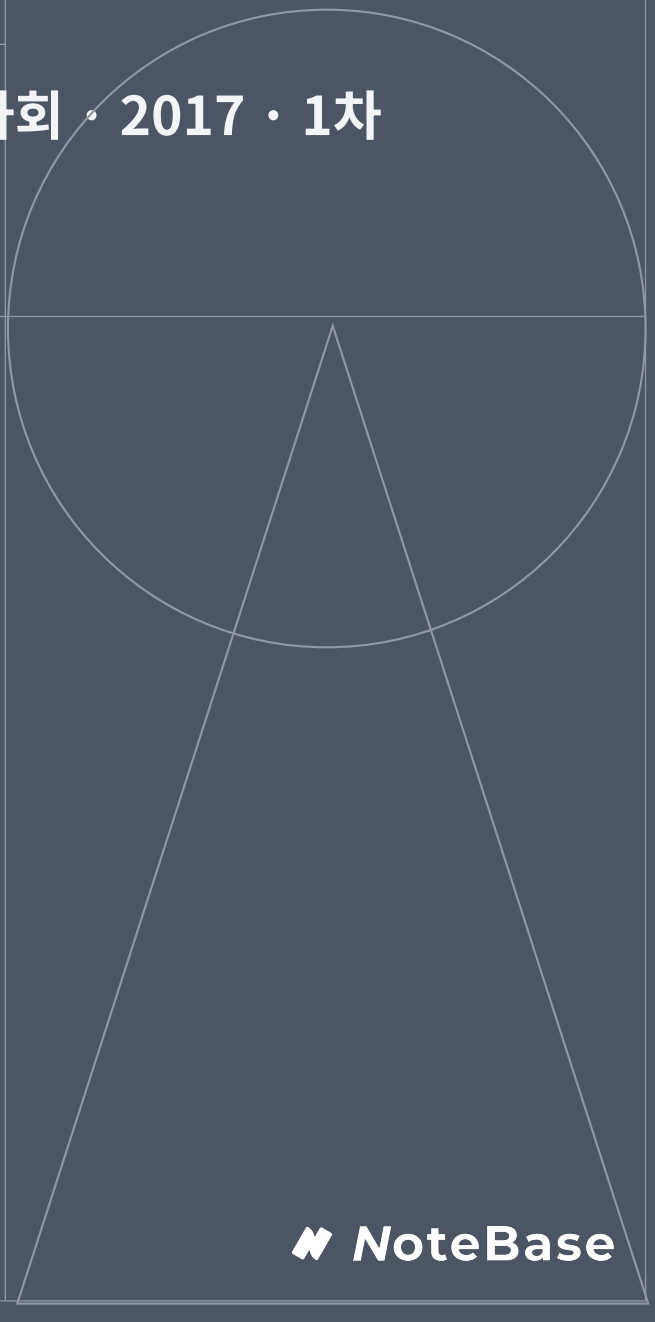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1차

문 1.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② 준거 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③ 이익 사회는 결사체라고도 하며 협동심보다는 경쟁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이 많고 최근 1차 집단보다 더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 집단을 외집단·준거 집단·이익 사회·2차 집단으로 구분하고,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반드시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집단은 자신이 속하지 않으며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가치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결사체이며, 2차 집단은 간접적·형식적 관계가 중심이 되는 집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외집단은 타인 집단이라고도 하며, 구성원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껴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집단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소속 집단과 일치하고'이다. 준거 집단은 비교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지만, 자신이 실제로 속한 소속 집단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O —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결사체이다.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수단적 관계가 중심이므로 협동심보다 경쟁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④ O — 2차 집단은 구성원 사이의 간접적·형식적·수단적 접촉이 중심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조직과 제도의 발달로 1차 집단보다 그 비중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는 준거 집단의 정의에 ‘소속 집단과 일치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혼동을 유도한다. 준거 집단은 현재 소속 여부가 아니라 비교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집단을 구분할 때는 소속 여부, 판단 기준 여부, 결합 목적, 접촉 방식을 각각 확인한다. 특히 준거 집단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으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소속 집단은 실제로 속한 집단, 준거 집단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며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가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자극 전파는 포르노그래피나 폭력물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일으키는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다.

③ 문화 접변은 문화 변동의 한 형태로,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④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 문화 지체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화 변동의 의미와 원인·양상·결과를 구분하고, 자극 전파·문화 접변·문화 지체의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 변동: 새로운 문화 요소가 생기거나 기존 문화 요소가 달라져 한 사회의 문화 체계와 생활 양식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변화까지 모두 문화 변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극 전파: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나 원리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 내는 간접 전파이며, 외재적 요인에 해당한다.
문화 접변: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로 문화 공존·문화 융합·문화 동화가 나타날 수 있다.
문화 지체: 기술과 같은 물질문화가 빠르게 변하는 데 비해 가치관·규범·제도와 같은 비물질문화의 변화가 늦어 생기는 부조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구성원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까지 다 포함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문화 요소의 모든 사소하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문화의 내용이나 구조 및 생활 양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② X — '자극적인 내용' 및 '내적 요인'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자극 전파는 외부 문화의 아이디어나 원리가 자극이 되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간접 전파이므로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이다.
③ X —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인과관계가 틀렸다.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나며, 문화 동화·문화 공존·문화 융합은 문화 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④ O —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빠르면 두 문화 영역 사이에 부조화가 생기며, 이를 문화 지체라고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자극'을 선정적·폭력적 내용이라는 일상적 의미로 바꾸어 놓았고, ③은 문화 접변의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 자극 전파의 자극은 외래문화가 제공하는 발명의 실마리이고, 동화·공존·융합은 접변의 결과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 변동 문항에서는 먼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한다. 발견·발명은 내재적 요인이고 전파는 외재적 요인이며, 직접 접촉에 따른 문화 접변의 결과는 공존·융합·동화이다. 물질문화의 변화가 앞서고 비물질문화가 뒤처지면 문화 지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극 전파는 외부 문화가 준 발명의 자극, 접변의 결과는 공존·융합·동화, 물질문화가 앞서면 문화 지체이다.

NoteBase

문 3.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②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③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이 있다.

④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자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 복지의 기본 이념과 사회 보장의 세 가지 형태인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활동의 총체이다.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 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 능력과 자립을 돕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사회 복지는 사회적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바탕으로 기본적 욕구 충족과 생활 보장을 추구한다.
② O — 사회 복지는 사회 보장 제도로 구체화되며, 대표적인 형태가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이다.
③ O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보험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의 다섯 가지이다.
④ O — 사회 서비스는 현금 지급 자체보다 상담·돌봄·재활·직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과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회 복지의 목적에 관한 뒷부분은 옳지만, 그 사상적 기초를 '자유방임주의'라고 바꾸어 놓았다. 목적이 맞더라도 출발 이념이 반대이면 선지 전체는 틀리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복지의 이념을 묻는 선지에서는 국가 개입의 방향을 먼저 본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적극적 생활 보장이 사회 복지의 핵심이다. 또한 현금·소득 보장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상담·돌봄·재활 같은 비금전적 도움은 사회 서비스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복지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적극적 생활 보장이며, 사회 보장은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로 구성된다.

NoteBase

문 4. 다음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각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구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교수 및 선후배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존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대학가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팀에서는 신입생, 재학생, 학생회 간부, 교수, 직원, 대학의 관련 부서의 장, 대학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③ 연구자의 주관적 성향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연구 상황이 면접법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면접법은 조사자가 연구 대상자와 대면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문자를 읽고 쓰기 어려운 사람도 조사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대상자 선정과 섭외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면접법은 조사자가 질문을 말로 제시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으므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이다. 면접법은 연구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섭외해야 하므로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찾기가 쉽다고 보기 어렵다.
③ O — 질문 방식이나 응답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태도와 판단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④ O —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 면접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지만, 추가 질문을 통해 응답의 동기와 맥락까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면접법은 원하는 대상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적합한 대상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은 장점이지만, 대상자 선정과 섭외의 용이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자가 대상자와 대화하며 추가 질문을 하는 상황이면 면접법으로 판단한다. 면접법은 문맹자 조사와 심층 자료 수집에는 유리하지만, 시간·비용, 대상자 섭외, 조사자 주관의 개입에는 불리하다.

암기 포인트

면접법은 '깊게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을 구해 직접 만나야 한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대중 매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도 한다.

③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오락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도 있다.

④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대중 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고, 대중 매체가 정보 전달을 넘어 해석·문화 전수·사회적 동원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고 사회 현상을 해석하며 여론 형성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순기능에는 정보 제공, 사회 환경의 감시와 해석, 문화유산 전수, 오락, 사회 구성원의 결집과 동원이 있다. 반면 선정성·폭력성의 확산이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 같은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대중 매체는 사회적 쟁점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수용자의 판단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② O — 대중 매체는 정보를 수집·정리해 제공하며, 한 사회의 가치·규범·지식과 같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
③ O — 대중 매체는 오락을 제공하지만 선정적·폭력적인 내용을 확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기능도 나타낼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여 행동하도록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 대중 매체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대중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내는 사회적 동원 기능도 수행한다.

오답 포인트

대중 매체를 정보 제공 수단으로만 좁게 이해하면 ④의 '동원하지 않는다'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재난 구호 참여나 공익 캠페인처럼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을 촉진하는 것도 대중 매체의 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정보 제공·해석·문화 전수·오락·사회적 동원 중 어느 기능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선정성·폭력성·오정보처럼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면 역기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하지 않는다'와 같은 단정적 부정 표현은 실제 기능의 범위를 축소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중 매체는 알리고, 해석하고, 전수하고, 즐기게 하며, 때로는 함께 행동하게 한다.

NoteBase

문 6. 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④ 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면서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최고 규범이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헌법의 이념성 = 헌법이 가치 중립적인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문화국가, 평화주의 등 국가 공동체가 지향할 기본 가치를 담는 성격이다.

핵심 구분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객관적인 규범으로 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념이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개별 조항을 통해 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문화의 계승·발전, 국제평화 등의 지향을 분명히 밝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항구적인 세계평화 및 인류공영을 지향하고, 헌법 제9조·제34조 등은 문화의 계승·발전과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국가의 과제로 정한다. 따라서 복지 국가, 문화 국가,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구성·행사·통제는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정당성에 구속되므로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③ X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이지만 가치 중립적인 규범은 아니며, 국가 공동체가 추구할 기본 이념과 가치 질서를 담는다.
틀린 표현: '이념성을 지녀서는 안 된다'
올바른 표현: 헌법은 국가 건설의 토대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국가가 지향할 이념과 가치를 제시한다.

④ O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로 본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표현만 보고 옳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헌법이 객관적인 최고 규범이라는 점과 헌법이 특정한 기본 이념과 가치 질서를 담는다는 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출제자는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을 같은 뜻으로 오해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헌법의 성격을 묻는 선지에서는 '최고 규범'이라는 형식적 성격과 '기본 이념·가치 질서의 구현'이라는 실질적 성격을 함께 확인한다. '헌법은 이념이나 가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헌법은 국가의 틀이면서 가치의 나침반이다. 국민주권·자유민주·복지·문화·평화를 함께 담는다.

NoteBase

문 7.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등권이란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는 수단적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평등권·자유권·참정권·사회권의 의미와 기본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뜻한다.
자유권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선거·공무담임·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가 기관의 구성과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수단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필요한 급부와 사회적 조건의 마련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평등권은 개인 사이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전혀 무시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이를 고려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한다. 다만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X —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성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성격은 주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③ X — '국가 기관의 구성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틀렸다. 참정권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통해 국가 기관의 구성과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수단적 권리이다.
④ X — '소극적 권리'라는 부분이 틀렸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서로 바꾸어 제시했고, ③은 참정권의 핵심인 국가 기관 구성 참여를 부정했다. ①도 모든 차이가 곧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간섭을 막는 권리는 자유권, 국가에 생활 조건의 마련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 국가 기관의 구성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참정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권리는 평등권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 참정권은 능동적·수단적 권리,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NoteBase

문 8.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을 말한다.

② 불법 행위의 조건에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

③ 친구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도중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④ 약속 시간까지 배달을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는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특수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손해의 범위, 동물로 인한 손해의 책임 주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채무 불이행 =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손해에는 재산적·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와 그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1차

선지별 해설

① X
불법행위로 배상되는 손해는 물질적·신체적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가해자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틀린 표현: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만'
올바른 표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O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각 요건을 빠짐없이 제시한 설명이다.

③ X
친구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에는 개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인이 특수 불법행위의 책임 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물의 점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를 대신하여 실제로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누가 개를 점유·보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틀린 표현: '개 주인이 특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올바른 표현: 개가 사람을 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동물 점유자 또는 그를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④ X
배달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한 때까지 배달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금전 지급 의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틀린 표현: '금전이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약속한 때까지 배달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금전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손해를 물질적·신체적 손해로만 좁히거나, ③에서 동물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보관자를 같다고 보거나, ④에서 채무를 금전 채무로만 생각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법행위 문항에서는 먼저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동물이 낸 손해는 사고 당시의 점유·보관자를 확인하고, 계약상 약속을 어긴 사안은 급부가 금전인지와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책임능력－위법성－손해－인과관계이고, 동물 책임은 점유·보관자,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급부의 불이행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9.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한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번에 구입한 A사의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였다.

② 새로 나온 B사의 자동차 모델을 구입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녹색으로 도색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다.

③ 인터넷으로 구입한 C사의 냉장고에 제조일자가 없어 언제 만들어졌는지 판매 사이트에 문의하였다.

④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km 이내 D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소비자의 행동이 소비자기본법상 기본적 권리와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행동과 상인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비자의 8대 권리란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말한다.

핵심 구분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가 물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한다.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있지만, 상인의 영업상 이익인 골목 상권 보호 자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는 물품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교육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받을 권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O — 자동차의 색상을 선택하여 거래조건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물품과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O — 냉장고의 제조일자를 문의하는 것은 물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사례이다.
④ X —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건설에 반대하였다. 올바른 표현: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형마트 건설 정책이나 사업활동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에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처럼 보이는 반대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의견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의견이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것인지이다. '골목 상권 보호'는 소비자의 권익이 아니라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의 행동만 보지 않고 그 행동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확인한다. 정보·선택·교육·피해 보상·소비환경 등 소비자의 소비생활상 이익을 위한 행동이면 소비자의 권리와 연결되고, 생산자나 상인의 영업상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사례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소비자 권리는 소비생활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골목 상권 보호는 상인의 이익 보호이다.

NoteBase

문 10.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근대 민법의 세 기본 원리와 현대 민법에서 이를 보완하는 원리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여 사유 재산권 존중, 자유 계약, 과실 책임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 현대 민법은 사회적 공정과 공공복리를 반영하여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의 원리로 보완한다. 사적 자치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넓은 원리이며, 자유 계약의 원칙은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은, 일정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으로 보완된다.
② O —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정한다는 자유 계약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을 제한하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으로 보완된다'이다. '공적 이익 우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응하는 표준적인 보완 원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자유 계약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보완된다'이다.
④ O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보완된다. 선지의 '소유권 공공의 원칙'은 이러한 취지의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적 자치'와 '공적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반대말을 연결한 함정이다. 보완 관계는 추상적인 반대말이 아니라 사유 재산권 존중–소유권 공공복리, 자유 계약–계약 공정, 과실 책임–무과실 책임의 세 쌍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지의 기본 원리를 재산권·계약·책임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재산권은 공공복리, 계약은 공정, 책임은 무과실과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재산권–공공복리, 계약–공정, 과실–무과실의 세 쌍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 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하므로 국민의 의사는 입법부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인 법률에 의거한 지배는 국민의 지배이므로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①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②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③ 민주정치를 통해서만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④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민주정치와 법치주의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관계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권력이 구성되고 행사되는 정치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미리 정해진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정치는 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민주정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므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권력이 그 법률에 따라 행사되므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는 서로를 보완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법치주의는 민주정치 이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정치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관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민주정치를 통해서만'이다. 법치주의를 민주정치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때 민주정치와 법치주의가 함께 구현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법을 통해서만'이다. 법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제도적 보장 수단이지만, 민주정치의 이념은 선거, 국민의 정치 참여, 여론 형성 등으로도 실현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우선', ③과 ④의 '통해서만'처럼 관계를 서열화하거나 하나의 수단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함정이다. 제시문은 법치주의가 민주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설명할 뿐, 어느 한 원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거나 유일한 실현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이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 관계로 판단한다. ‘항상’, ‘오직’, ‘통해서만’, ‘우선한다’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제시문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민주정치는 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치주의는 민주정치를 제도화한다.

NoteBase

문 12.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③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④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장치와 선거구의 대표자 선출 방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원칙이다.
선거공영제 = 국가기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일정한 선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후보자 간 기회균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사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또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며, 공직선거법은 요건을 충족한 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적은 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이지, 선거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공정선거 관리 제도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면 집권 세력 등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선거구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② O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와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전한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내용이다.

③ O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④ X
소선거구제는 선거 관리나 선거운동의 감시·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모든 선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다.
틀린 표현: 선거 관리와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올바른 표현: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선거구제는 대표 선출 방식에 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선거별로 정해진다.

오답 포인트

④는 소선거구제를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단속 제도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 함정이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당 대표자 수에 관한 제도이고, 선거의 관리·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거구를 누가 정하는지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를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선거공영제,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지는 선거구제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거구는 법률, 공정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지원은 선거공영제, 대표자 수는 선거구제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을 선택하려고 한다.)

〈표1〉 1단위 추가 소비할 때 편익의 증가분

구분	1단위	2단위	3단위
사과	2,500원	2,300원	2,100원
배	3,000원	2,500원	2,000원

〈표2〉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조합

구분	A	B	C	D
사과	3개	2개	1개	0개
배	0개	1개	2개	3개

①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B이다.

②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작다.

③ A, B, C, D의 지출액은 서로 다르다.

④ B조합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D조합을 선택할 경우와 같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계편익을 누적해 각 조합의 총편익과 순편익을 구하고, 선택의 기회비용을 최선의 포기 대안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사과의 1~3단위 편익은 각각 2,500원, 2,300원, 2,100원이고, 배의 1~3단위 편익은 각각 3,000원, 2,500원, 2,000원이다. A~D는 모두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조합이므로 지출액은 모두 3,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총편익은 소비한 각 단위의 편익을 모두 합한 값이다. 순편익은 총편익에서 지출액을 뺀 값이다. 기회비용은 선택 때문에 포기한 대안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의 가치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A의 총편익은 2,500 + 2,300 + 2,100 = 6,900원이므로 순편익은 3,900원이다.
B의 총편익은 2,500 + 2,300 + 3,000 = 7,800원이므로 순편익은 4,800원이다.
C의 총편익은 2,500 + 3,000 + 2,500 = 8,000원이므로 순편익은 5,000원이다.
D의 총편익은 3,000 + 2,500 + 2,000 = 7,500원이므로 순편익은 4,500원이다.
따라서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C이다.

선지 판단

① X — 순편익은 B가 4,800원, C가 5,000원이므로 가장 큰 조합은 B가 아니라 C이다. 올바르게는 '순편익이 가장 큰 조합은 C이다.'이다.
② X — B의 편익은 7,800원이고 D의 편익은 7,500원이므로 B의 편익이 더 크다. 올바르게는 'B조합의 편익이 D조합의 편익보다 크다.'이다.
③ X — 표 2의 A, B, C, D는 모두 3,000원으로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이므로 지출액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같다. 올바르게는 'A, B, C, D의 지출액은 모두 3,000원으로 같다.'이다.
④ O — B를 선택하면 포기한 A, C, D 가운데 최선은 C이고, D를 선택해도 포기한 A, B, C 가운데 최선은 C이다. 두 선택 모두 최선의 포기 대안이 C이므로 기회비용이 같다.

오답 포인트

표 1의 수치는 각 단위의 한계편익이므로 소비량만큼 누적해야 한다. 또한 ④에서는 B와 D의 편익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선택할 때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조합을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재화의 소비량만큼 한계편익을 누적해 총편익을 구하고, 지출액을 빼서 순편익을 비교한다.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대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총편익은 한계편익의 누적, 순편익은 총편익에서 지출액을 뺀 값, 기회비용은 최선의 포기 대안이다.

NoteBase

문 14.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구분된다.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④ 과세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법인세는 내국세로 구분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세를 과세 주체,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과세 목적, 과세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하나의 세금이 각 기준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직접세는 법률상 세금을 납부할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같은 세금이다. 간접세는 납세자가 낸 세금이 가격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세금이다.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세금이고,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핵심 구분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과세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 장소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국세로 규정하고,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지방세의 보통세로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취득세와 등록에 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선지의 '등록세'에 대응하는 현행 세목명은 '등록면허세'이다.

②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세금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간접세이다.

③ X
소득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이다.
틀린 표현: 소득세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올바른 표현: 소득세는 보통세로 구분된다.

④ O
법인세는 국가가 국내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면서 내국세이다. 관세처럼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구별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목적세'가 함정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때문에 특정 목적을 위한 세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득'은 과세 대상일 뿐 세수의 사용 목적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누가 부과하는가'는 국세·지방세, '누가 실제 부담하는가'는 직접세·간접세, '용도가 정해져 있는가'는 보통세·목적세, '국내 과세인가 국경 통과 물품 과세인가'는 내국세·관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세는 보통세·직접세·내국세이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을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남부지방의 축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였다. 올해 1월에 중부지방에서도 구제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발생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기르던 소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②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④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의 살처분으로 국내산 소고기 공급이 감소할 때 소고기 시장과 대체재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전체 사육두수의 20%에 이르는 소가 살처분되어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한다.
판단 조건: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으므로 공급 감소와 대체재 관계에 따른 변화만 판단한다.

핵심 개념

공급 감소는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거래량을 감소시킨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재화 대신 소비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재화이다.

적용 기준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 감소로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대체재인 수입산 소고기·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들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국내산 소고기의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② O —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수입산 소고기로 수요가 이동하므로 수입산 소고기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③ O — 국내산 돼지고기는 소고기의 대체재이므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④ X — '국내산 닭고기 소비량은 감소할 것이다'가 틀렸다. 닭고기도 소고기의 대체재이므로 수요가 증가하며, 올바르게는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소의 살처분이 축산물 전반의 소비 감소를 뜻한다고 오해하면 ④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살처분은 국내산 소고기의 공급을 줄이는 사건이며, 소고기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같은 대체재의 수요를 늘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건이 어느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 무엇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해당 시장의 가격·거래량 변화를 판단하고, 가격 변화가 대체재의 수요를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은 대체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국에는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다. 철강재의 생산을 위하여 갑국 정부는 국영기업 A를 설립하여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A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로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여 A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경영부실이 계속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결정되었다.

① A기업은 갑국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② 갑국은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A기업을 설립하였다.

③ A기업의 설립으로 갑국에서 철강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④ A기업의 민영화는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영기업의 설립과 민영화를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갑국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없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려고 국영기업 A를 설립하였다. 이후 A기업은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하락하고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핵심 개념

시장 실패는 시장에 맡겼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이고,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상태이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이지만 철강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기준

기업이 전혀 없어 필요한 재화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독점이 아니라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본다. 정부가 세운 국영기업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적자 누적이 나타났다면 정부 개입의 비효율인 정부 실패로 판단하며, 민영화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철강재는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사용한 양을 다른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사적 재화이다. 틀린 표현인 '공공재를 생산한다'는 '사적 재화인 철강재를 생산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갑국에는 철강재 공급 기업이 아예 없었으므로 A기업의 설립 목적은 기존 기업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철강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는 '철강재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③ X — A기업은 이전에 공급되지 않던 철강제품을 시장에 공급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을 완화하였다. 틀린 표현인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불균형이 완화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국영기업 A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적자를 누적한 것은 정부의 직접 생산에서 발생한 비효율, 즉 정부 실패에 해당한다. 민영화는 경쟁과 경영 효율성을 높여 이러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려는 방안이다.

오답 포인트

철강 산업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만 보고 독점 문제로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사례에는 독점기업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공급 기업 자체가 없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민영화의 직접적 배경은 국영기업의 적자 누적과 경영 비효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먼저 시장의 문제와 정부 개입 이후의 문제를 시간 순서로 나눈다. 민간 공급의 부재는 시장 실패, 국영기업의 비효율과 적자 누적은 정부 실패, 그에 대한 민영화는 정부 실패의 보완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간의 공급 부재는 시장 실패, 국영기업의 방만·비효율은 정부 실패, 민영화는 정부 실패의 보완책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기술의 혁신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①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②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④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변화로 근로자의 기존 기능이 새 일자리의 요구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 그 대책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로 노동자가 가진 기술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에는 직업교육·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게 하는 대책이 적합하다. 경기적 실업은 총수요 부족,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일자리 사이의 정보·탐색 문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공공사업 시행과 경기 부양책 확대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긴 경기적 실업에 주로 대응한다. 틀린 부분은 이를 구조적 실업의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본 점이며, 구조적 실업에는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재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확대하면 기존 기능과 새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구조적 실업의 직접적인 대책이다.
③ X — 취업정보 제공은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이의 정보 부족과 탐색 기간을 줄이는 대책이므로 마찰적 실업에 주로 대응한다. 틀린 부분은 이를 구조적 실업의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본 점이며, 구조적 실업에는 기술 전환을 위한 직업교육과 재훈련이 필요하다.
④ X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사회보장 대책이지만 기술 불일치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틀린 부분은 실업급여 지급을 구조적 실업의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본 점이며, 직접적인 대책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직업교육과 재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④도 넓은 의미의 실업 대책처럼 보이지만, 문항은 자동화로 기존 기능 인력의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대책을 묻는다. ③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정보와 탐색에 시간이 걸리는 마찰적 실업의 대책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인과 대책을 연결한다. 경기 침체·총수요 부족이면 경기 부양,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기능 불일치이면 직업교육과 재훈련, 구인·구직 정보 부족이면 취업정보 제공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경기적 실업은 수요 확대, 구조적 실업은 재교육, 마찰적 실업은 정보 제공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이 X재와 Y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은 1:1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명	12명
을국	9명	8명

① X재 생산에서 갑국은 을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② Y재 생산에서 을국은 갑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다.

③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④ 갑국의 X재 1단위와 을국의 Y재 1단위를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재화의 단위당 노동량으로 절대우위와 기회비용을 구해 비교우위를 판별하고, 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갑국의 단위당 노동량: X재 10명, Y재 12명
을국의 단위당 노동량: X재 9명, Y재 8명
교환비율: X재 1단위와 Y재 1단위를 교환한다.
노동량이 적은 나라가 절대우위를 가지며, 한 재화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 나라가 그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사용할 공식

노동만 투입되는 경우 L_X를 X재 1단위의 노동량, L_Y를 Y재 1단위의 노동량이라고 하면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OC_X = \frac{L_X}{L_Y}$
$OC_Y = \frac{L_Y}{L_X}$
OC_X의 단위는 Y재이고 OC_Y의 단위는 X재이다. 같은 노동으로 대신 생산할 수 있었던 다른 재화의 양이 포기량이므로 이 비율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10/12 = 5/6단위의 Y재, 을국이 9/8단위의 Y재이다. 따라서 갑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2.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12/10 = 6/5단위의 X재, 을국이 8/9단위의 X재이다. 따라서 을국이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3. 교환비율 1:1에서 갑국은 X재 1단위를 내주고 국내에서 포기하는 5/6단위보다 많은 Y재 1단위를 얻는다. 을국은 Y재 1단위를 내주고 국내에서 포기하는 8/9단위보다 많은 X재 1단위를 얻으므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선지 판단

① O.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5/6단위의 Y재, 을국이 9/8단위의 Y재이므로 갑국이 더 작고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② O. Y재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8명, 갑국이 12명이므로 을국이 Y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진다.
③ X.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가 틀린 표현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9/8, 갑국이 5/6단위의 Y재이므로 올바르게는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이다.
④ O. 1:1 교환에서 갑국은 X재 1단위의 국내 기회비용 5/6단위보다 많은 Y재 1단위를 받고, 을국은 Y재 1단위의 국내 기회비용 8/9단위보다 많은 X재 1단위를 받으므로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동하게 만든다. 을국은 X재 생산에도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므로 절대우위는 있지만, X재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갑국이 더 작다. 노동량 자체는 절대우위, 노동량의 비율로 구한 기회비용은 비교우위를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재화의 노동량을 비교해 절대우위를 찾고, 다음으로 노동량의 비율을 이용해 두 재화의 기회비용을 각각 구한다. 교역 이익은 제시된 교환비율이 두 나라의 해당 재화 기회비용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더 적은 투입량', 비교우위는 '더 작은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19.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가 감소하고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③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에게 송금하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수출입 가격과 해외여행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원화 가치 상승은 같은 1달러를 바꾸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뜻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외국 상품과 해외 활동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저렴해지고, 우리나라 상품과 국내 활동은 외국인에게 비싸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화로 표시한 수출가격이 그대로라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그 상품의 달러화 표시가격은 오른다. 외국 구매자에게 우리나라 상품이 비싸지므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O. 같은 달러 가격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수입 원재료의 원화 환산가격과 생산비가 낮아져 국내 물가의 하락 요인이 된다.
③ O. 미국의 생활비나 학비로 같은 금액의 달러를 송금할 때 필요한 원화가 줄어들므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해외여행 수요는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증가한다'이다. 실제로는 해외여행 비용의 원화 환산액이 낮아져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한국 여행 비용의 외화 환산액이 높아져 외국인의 국내여행 수요는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원화 가치 상승의 효과를 원화 가치 하락의 효과와 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환율의 상승·하락이라는 말보다 누구의 통화로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수입·해외여행·해외송금의 원화 부담은 줄고, 수출품·국내여행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비싸진다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원화 강세는 수입과 해외 소비에 유리하고, 수출과 외국인의 국내 소비에는 불리하다.

NoteBase

문 20.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길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길동씨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인상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기존의 대출금 중에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을 조기상환한다.

② 아파트 구매를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같은 이자율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받는다.

③ 예비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④ 일시적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우량기업 회사채를 매각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리 상승이 대출 이자 부담, 채권 가격, 금융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자산·부채 관리 방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 매력이 낮아져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예비자금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성보다 유동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운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원리금을 미리 상환하여 앞으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다.
② O — 같은 이자율이라면 고정금리 대출은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해도 약정금리가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X — 예비자금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돈이므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정기예금에 넣으면 유동성이 떨어진다. 틀린 표현은 '보유기간이 장기인 정기예금에 가입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예비자금을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단기·고유동성 금융상품에 보유한다.
④ O —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일시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회사채를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 전에 매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정기예금'이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만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예비자금의 핵심 목적은 긴급한 지출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장기 예치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함께 보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부채에서는 변동금리 부담 증가, 채권에서는 기존 채권 가격 하락을 먼저 떠올린다. 자금 운용에서는 돈의 목적을 확인하여 예비자금이면 유동성을, 장기 여유자금이면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금리 상승: 변동금리 대출 부담 증가, 기존 채권 가격 하락. 예비자금: 장기 묶임보다 즉시 인출이 우선이다.

NoteBase